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균등 수혜 방안

수행과제명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성 인지적 분석

과제책임자 : 정해숙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21, e-mail: hsjung@kwidimail.re.kr

요 약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남녀평등에 대한 고려가 없어 고용률의 성별 차이가 현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기금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성별 균등 수혜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

1. 필요성 및 목적

□ 1990년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2009년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평등에 대한 고려가 없어 고용률의 성별 차이가 현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아래 2008년 8월 국회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시 장애여성과 장애남성을 동일한 비율로 고용하는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 이에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부터 남녀 균등 수혜를 보장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정책의 추진 방향

□ 첫째, 여성과 장애라는 복합적 불리함을 가진 장애여성의 적극적인 노동권 확보를 위해, 경증남성장애인에게 수혜가 편중되어 있는 현행 의무고용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 의무고용 여성장애인 채용목표제 실시(목표도달까지 점진적으로 채용을 증대)
- 장애여성에 대한 더블카운트제도 도입(여성장애인 고용 시 일정배수 고용으로 인정)
- 의무고용 대상 장애인 범주의 조정(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을 주 대상으로)
-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이원화된 의무고용제 운영 실적 통합관리

장애여성의 의무고용 수혜율은 장애남성의 3분의 1수준이며, 이러한 성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의무고용제 운영의 남성 편향성은 장애인 고용률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 중의 하나로 판단됨. 2008년 등록장애여성의 고용률은 23.7%로 남성(47.6%)의 절반수준임. 등록장애인 취업자중 의무고용으로 취업된 비율은 여성 6.9%, 남성 15.7%로 장애여성들이 장애남성만큼 의무고용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낮은 취업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둘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성 인지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등록장애인 중 생산연령인구의 여성비율을 성 형평성 점검 기준으로 활용
- 세부사업별 집행실적에 대한 성별 보고체계 구축 및 실적 관리

□ 셋째, 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 기능훈련에 있어서 장애여성의 훈련기회 확대

- 5개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장애여성 기능훈련 확대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제도화

- 장애여성을 위한 훈련직종 다양화와 취업연계 맞춤형 직업훈련수요 발굴 노력 강화
- 출·퇴근하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파견교육장 운영으로 장애여성의 접근성 제고

□ 넷째,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장애여성전용 훈련과정 설치 및 통합교육지원 체계 구축

- 한국폴리텍 여자대학을 장애여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 시범기관으로 선정·운영
- 전국 4개 권역별로 1개소씩을 지정하여 장애여성의 통합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강구

□ 다섯째, 장애여성에 대한 평생교육기회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교육지원체계 구축사업’에 장애여성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사업 추진

장애여성에게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충분한 훈련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08년 현재 장애여성의 67.3%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장애남성에 비해 학력수준이 월등히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전체 수료생 중 여성비율은 27.6%로 노동부 권고 기준인 30%에 못 미치며, 기능훈련 수료생 중 여성비율은 23.1%에 불과함. 경증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공공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의 여성비율은 이보다 낮은 10.9%에 불과함. 최근 들어 장애여성의 직업훈련에 대한 태도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음. 2008년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기능훈련을 받기 위해 직종선정평가에 응시한 장애여성은 21.5%로, 2006년보다 6%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고, 직종선정평가 합격률이나 직업능력개발센터 입학률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이 장애남성보다 2% 포인트 가량 더 높게 나타남. 뿐만 아니라 직종선정평가에 응시한 장애여성의 학력을 보면, 초급대학 이상이 32.2%로 장애남성(27.7%)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냄. 이처럼 주로 고학력 장애여성들이 기능훈련에 참여하는 사실은, 장애여성의 경우 낮은 학력수준이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욕구나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함

- 여섯째, 창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창업지원 전담부서 신설

창업지원 사업들 중 담보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영업장소 전대사업은 성형평적 수혜를 보여준데 반해, 제도적 개입 없이 장애인 개인의 여력에 맡겨놓은 창업자금 융자사업에서는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남. 이는 장애여성의 창업욕구가 장애남성에 비해 적지 않으나, 사회경제적 조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3. 정책효과

- 장애여성의 의무고용 수혜율과 창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지고, 직업훈련 참여기회가 높아짐으로써 장애여성의 자립 기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임. 나아가 이 결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실효성과 성과를 제고하게 될 것임